

경제민생점검회의

# 2005년 경제운용방향

2004. 12. 29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

# 목 차

I . 2005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 .....	1
1. 경제정책 운용의 틀 .....	1
2. 2005년 중점 운용방향 .....	7
(1) 05년 대내외 경제여건 .....	8
(2) 05년 정책여건 .....	9
(3) 05년 중점과제 .....	10
II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경기관리 .....	13
1. 재정 조기집행과 공공부문 투자확대 .....	13
(1) 재정 조기집행 .....	13
(2) 공공부문 투자 확대 .....	14
2. 종합투자계획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	15
(1)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	15
(2) SOC 조기 확충 .....	17
(3) 임대주택사업 활성화와 안정적 주택공급 .....	18
3. 가계 · 중소기업 대출의 연착륙 도모 .....	20

### Ⅲ. 양질의 폭넓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 21

#### 1.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 21

- (1)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21
- (2) 벤처기업 활성화 ..... 22
- (3) 부품·소재 산업 육성 ..... 24

#### 2. 개방과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25

- (1) 기술혁신형 성장전략 추진 ..... 25
- (2)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 27
- (3) 농어업의 체질강화 ..... 29
- (4) 친환경적·자원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 30

#### 3. 능동적 대외개방과 해외진출 강화 ..... 32

- (1) FTA와 DDA협상을 통한 능동적 대외개방 추진 ..... 32
- (2)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 33
- (3) 동북아 경제중심의 본격화 ..... 35
- (4) 해외진출 지원 강화 ..... 37
- (5) 양자·다자간 경제협력 강화 ..... 40
- (6) 남북경협 활성화 ..... 41

#### 4. 경제시스템 선진화 ..... 42

- (1) 규제개혁 가속화 ..... 42
- (2) 금융시스템 선진화 ..... 44
- (3)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 ..... 46
- (4) 공공부문 효율화 ..... 47

(5) 선진적 노사관계의 구축 .....	49
(6) 부동산 시장의 합리성 제고 .....	50
(7) 소비자 주권 향상 .....	52
<b>5. 국가균형 발전 노력 지속 .....</b>	<b>53</b>
(1) 국가균형 발전계획의 차질없는 수행 .....	53
(2) 기업도시 건설 .....	54
<b>IV.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b>	<b>55</b>
<b>1. 교육기회의 확대 .....</b>	<b>55</b>
<b>2. 자활능력 배양 .....</b>	<b>56</b>
(1) 직업능력 개발체제 강화 .....	56
(2) 일자리 창출 등 취업지원 노력 강화 .....	57
(3) 여성·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	58
(4) 서민·중산층 가계의 부담 완화 .....	59
(5) 소상공인·재래시장 지원 강화 .....	60
<b>3. 사회안전망 강화 .....</b>	<b>61</b>
(1) 기초생활보장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61
(2) 보육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시스템 확충 .....	62
(3) 4대 사회보험의 내실화 .....	63
(4)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방안 검토 .....	64
<b>V. 2005년 경제운용의 모습 .....</b>	<b>65</b>

# I. 2005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

## 1. 경제정책 운용의 틀

### < 기본방향 >

- ◇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
  - 우리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고용구조도 급변
  - 지금까지 제조업과 농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에서 그 이상 증가
    - \* 업종별 취업증감(91-03년, 만명) : 농업△78, 제조업△95, 서비스업 503
    - \* 기업규모별 취업증감(97-02년, 만명) : 중소기업 212, 대기업△125
  -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부분이 저생산 업종에서 이루어져 일자리의 질적 향상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
- ◇ 매년 노동시장 신규 진입 인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자면 연 40만개 이상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폭넓은 성장이 지속되어야 함
  -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완화, 기술혁신,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적극 추진
  -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등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여지가 큰 부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
  - 경쟁촉진과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확보
- ◇ 이와함께 지역균형발전, 환경친화적 개발, 에너지·자원 제약 극복, 고령화 대책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도 본격 추진

- ① 중소기업·서비스 산업 등 취약부문을 경쟁산업화해서 일자리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
- ① 혁신역량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창업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
-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R&D 투자 확대
    - \* 65년 이후 40년간 누적 대일적자(2,150억불) 대부분이 부품·소재 적지에 기인
  -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해 창업·기술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 보호위주의 양적 육성을 지양하여, 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②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
- 제조업, 수출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 해외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인 관광·레저·교육·의료 등에서 국내 산업의 고급화를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
  -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부분에 존재하는 과도한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의 점진적 구조조정
  - 농업도 정예선도농가 20만호(쌀전업농 7만호 포함)를 중심으로 경쟁산업화하고, 고부가가치 수출농업으로 육성
- ③ 성장 단계에 맞추어 보건·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수요증가에 부응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조업 고용감소 추세와 자영업 고용비중의 축소에 대처
  - 여성·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

② 첨단산업·대기업 등 앞서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정부간섭 축소 등으로 투자 분위기를 개선

- 정부지원은 10대 차세대 산업 등 신성장 동력 발굴, 우수 인력양성,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완화등을 통한 간접적인 뒷받침에 국한
- 기업경영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정착
- 노사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안정성 제고와 고용서비스 선진화 등 인프라를 구축

③ 취업능력을 배양하고 근로·사업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

①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기회의 확충

- 교육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소득향상, 계층간 이동성 확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
  - 공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력이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정부가 대책을 강구
- 학자금 대출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확충하고 가계 교육비 부담도 경감
  - \* 현행 이차보전방식을 정부보증방식으로 전환
  - \* 대출금액을 등록금에서 생활비까지 포함
  - \* 대출기간을 최장 20년까지 확대 등
- 기존 무상 학자금(Grant) 제도를 정비하여 과학기술계 연구개발 장학사업으로 개편

## ②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 가능하도록 근로의욕 고취

- 차상위계층, 중하위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 것이 급선무
-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 직업훈련체제 구축과 일자리 제공 등 취업지원 강화
- 저소득이나마 근로하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 기초생활 보장의 혜택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보완하고, 현행 조세 체계틀안에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방안도 검토

## ③ 사회안전망의 확충

- 경쟁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장치가 필요
  - 경기후퇴기 경제주체들이 더욱 위축되는 것은 사회 안전망이 미비하기 때문
- 사회안전망의 근간이 되는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
- 연기금 및 보험재정 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개선 하는 등 운영을 내실화하여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제고
- 공공보육·의료시스템을 확충하여 기본적인 서비스 보장



④ 향후 재정은 인력개발 및 사회적 지출소요의 확대에 부응해야 하므로 경제적 지출은 민자유치 등으로 보완

- 재정지출 구조를 선진국과 비교할 때 경제개발비 비중은 높은 반면 사회개발비 비중은 현저히 낮은 수준

- \* 한국 : 경제개발비 25%, 사회개발비 16%

- \* 선진국 : 경제개발비 6~9%, 사회개발비 50~60%

- 이는 민자·금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개발비를 재정에서 부담해 온 결과

- 앞으로는 적극적 민자유치와 자본시장 육성을 통해 경제적 지출을 대체

- \* BTL 방식 민자유치, PEF, KIC,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

- 재정은 사회안전망 확충, 인력개발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

⑤ 능동적 개방과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한 「개방형 통상국가」 실현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

- FTA·DDA 등 05년 예정된 통상협상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산업구조 개혁과 관련산업의 생산성 향상의 계기로 활용

- 해외 플랜트·건설·해운·IT 및 자원개발 협력분야에서 해외진출을 적극 도모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

-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시화, 금융·물류중심 기반구축 등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을 본격화하고, 첨단산업·고부가서비스업 등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

## ⑥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 마련

### ① 신행정수도 후속조치 마련 등 지역균형발전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성장의 저변을 확대

-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 발전시책과 병행하여 수도권규제의 합리화를 추진

### ②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

-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응하여 국내대책과 대외협상 전략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응

### ③ 에너지와 자원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원절약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 에너지원단위 : 한국(04) 0.303→(07목표) 0.277, 미국 0.246, OECD 0.180

-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실현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투자를 확대

### ④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경제활력을 유지

- 고령자의 고용상 제한 완화,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노인 취업 기회를 확대
- Reverse Mortgage제도를 활성화하여 노령자가 노후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2. 2005년 중점 운용방향

— < 기본방향 > —

- ◇ 05년 대내외 경제여건은 어려움이 예상
  - 국제유가·환율 등은 가변성이 커 불안요인이 잠재
  - 내수는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
  - 이에 대응할 정책수단의 유효성이 충분치 못한 상황
-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성장」은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촉진으로 경기회복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
  - 투자와 고용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회복되고 분배구조 개선도 가능
- ◇ 내수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
- ◇ 모든 정책수단을 「고용창출과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그 유효성을 평가하고 추진강도와 시기를 조율
  -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과 규제완화, 기술개발 등 미시정책을 망라하여 경기순환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조 개선 노력을 가속화
  - 각종 정책 추진시에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결정

## (1) 05년 대내외 경제여건

- 국제유가의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달러화 환율의 변동성 증대 등 해외경제여건은 가변성이 많은 상황
- 수출은 규모면에서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주요 교역상대국 성장세와 교역신장세는 소폭 둔화되는데 그쳐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
  - 그러나 주력 품목인 IT경기가 위축되고, 04년 중 높은 수출증가에 따른 반락효과로 수출 증가율은 큰 폭 둔화
-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건설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
  - 민간소비는 지난 2년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서겠지만, 회복속도는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 증가에 달려 있음
    - \* 가계부채 조정 지속, 준조세 부담 등 비소비성 지출증가, 영세 자영업자 소득불안,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마이너스 자산 효과 등
  - 설비투자는 수출둔화, IT 경기 위축 등으로 큰 폭의 회복세를 기대하기 곤란
  - 건설투자는 선행지표 감소세가 지속되고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위축세가 본격화될 전망
    - \* 미분양아파트(기말기준, 만호) : (02)2.5→(03)3.8→(04.11)6.5

## (2) 05년 정책여건

- 재정은 적자국채 발행 증대에도 불구하고 경기확장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
  - 일반회계 예산은 국채발행 6.8조원 포함 9.5% 증가(120.1→131.5조) 하였으나 비정상적 요인\* 제외시 5.5% 증가에 불과
    - \* 채무상환 증가(공적자금 상환 2.3조, 대러차관지급 0.7조)와 회계재편(지방양여금 폐지) 요인(1.6조)
  - 통합재정지출규모 기준으로는 6.8% 증가(182.0→194.3조) 하여 경상성장률에 못 미치는 수준
  - 통합재정 적자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년대비 소폭확대에 그쳐 경기조절에는 불충분
    - \* 관리대상수지 기준(사회보장·공적자금 제외)  
: 04년  $\Delta 7.2$ 조(GDP대비  $\Delta 0.9\%$ ) → 05년  $\Delta 8.2$ 조(GDP대비  $\Delta 1.0\%$ )
    - \* IMF 기준(순융자까지 제외)  
: 04년  $\Delta 0.5$ 조(GDP대비  $\Delta 0.1\%$ ) → 05년  $\Delta 1.4$ 조(GDP대비  $\Delta 0.2\%$ )
- 금융부문은 금융국제화, 시중자금의 부동화 등으로 정책적 유효성이 저하된 상태
  - 금융시장이 자금 중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외환시장은 달러화 약세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로 불확실성 상존

⇒ 한두가지 정책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할 때 모든 정책수단이 힘을 모으고 부담을 나누어 지는 정책조합(Policy Mix)적 접근방식이 불가피

### (3) 05년 중점과제

#### ① 재정 조기집행

- 소비회복 지연,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반기 중 재정을 최대한 조기 집행
  - \* 상반기 재정집행률 : (04) 55%(87.5조) → (05계획) 59%수준(약 100조원)
- 특히 일자리 부족이 예상되는 동절기 중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
  - \* 일자리관련 사업집행률(계획) : (05.1/4) 60%, (05.상반기) 80%이상
  - \* DB구축사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제공
- 아울러 주요 공기업들의 투자를 최대한 확대하는 등 경기대응 노력을 강화

#### ② 민자유치 종합투자계획의 본격 추진

- 집행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하반기에는 효과가 가시화 되도록 노력
- 종합투자계획이 경기관리 뿐만 아니라 민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적 투자의 시발점이 되도록 보완·발전
  - 연중 신규사업의 발굴, 사업내용 다양화, 민간의 창의와 신축성 유지로 정부계획 및 재정운용의 경직성 탈피
  - 기업신도시, 복합레저 도시 건설 등 민간주도의 지역 균형발전사업을 본격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

### ③ 건설경기의 위축 방지

- 건설부분의 고용 및 경기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은 또다른 부작용 예상
  - \* 일자리 감소,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관련서비스업 경기 위축 유발
-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 신도시 건설, 강북재개발, 기업도시 등 새로운 건설투자가 조기착공되도록 추진
- 개발이익환수제 시행과 함께 재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의 선별적 해제
-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개편도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

### ④ 벤처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 04.7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및 04.12월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착실히 추진
- IT·BT·NT 등 신산업분야 창업 촉진으로 우리경제를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시키는 초석 마련
- 공정거래에 기반한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 유도로 win-win 관계 정립
- 자본시장 육성으로 용자위주의 자금공급을 투자위주로 전환



## 5] 금융시장 안정

- 내년 상반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활한 만기연장을 유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해 적극적 신용회복 지원 방안 강구
-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구조 장기화를 유도하고 ‘네트워크 론’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대출의 연착륙 지원

## 6] 서민생활 안정

- 임대주택 활성화,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등으로 서민가계의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회복
  - 소득세 인하, 근로자의 표준소득 공제 확대 등 세부담도 경감
-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 노인·아동·장애인 지원강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강화
-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활급여 대상자 확대, 직업훈련 강화, 취업지원 등을 통해 자활사업을 활성화
-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자활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업종전환 등을 유도

## II.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경기관리

### 1. 재정 조기집행과 공공부문 투자확대

#### (1) 재정 조기집행

□ 상반기중 재정을 최대한 조기집행(재정집행률 59%, 전년동기 대비 12조원 증가)함으로써 내수를 보완

\* 상반기 재정집행률(%) : (02)48.7 → (03)53.0 → (04)55.0 → (05계획)59수준  
(집행금액, 조원) 73.7 83.3 87.5 100수준

○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통해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관리

- 특히, 1/4분기중에 매년 연초 집행이 부진한 R&D 등 공모사업과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절차 단축 노력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집중 시행하여 중산·서민층의 체감경기를 개선

- 특히,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들은 금년 집행실적보다 확대하여 1/4분기 60%, 상반기 80%이상을 집행

□ 국가·사회 전반의 네트워크화와 디지털화 추진하기 위한 IT 투자 확대를 통해 청년일 자리를 제공

○ 국유재산 등 국가정보의 DB 구축과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등으로 교통·물류시스템 개선

\* 기상정보 DB 등 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 각 부처 전산센터를 통합한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

## (2) 공공부문 투자확대

### □ 공기업 투자확대

- 05년도 주요 공기업(12개기관)의 투자는 최대한으로 확대 추진

\* (03실적) 18.4 → (04.11말 실적) 22.6 → (05계획) 24.6조원

- 석유비축기지 건설 확대(1,474→1,627억), 송변전·배전설비 확충등(35,205→36,170억),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31,500→56,000억) 등
- 04년 공기업투자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이어 05년에는 최소한 04년 수준 이상으로 투자 확대 추진

### □ 고속도로 운영권 활용

-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운영권을 활용,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하여 고속도로 조기 건설
- 유료도로관리권을 기초로 5~20년 만기 ABS를 발행하고, 이를 금융기관, 연기금 등에서 인수
- ABS는 향후 6년간 약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조달한 재원은 고속도로 건설에 재투자 → 21개 노선의 공기를 평균 2년 단축

## 2. 종합투자계획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 (1)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BTO, BOT와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을 추가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안 국회심의 중

○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부는 투자원리금을 임대료 방식으로 지급

\* 기존 BTO(Build-Transfer-Operate),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용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하는 방식

⇒ 민간사업자에는 사업운영 risk를 줄여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재정부담을 미래 장기간에 분산하여 공공서비스를 조기 공급

□ BTL 방식의 민자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토 등 대상사업 지정 절차를 간소화

#### < BTL 방식 절차 간소화 방안 >

	기존 절차	간소화 방안
대상사업 지정절차	예비타당성 검토 ↓ 본타당성 검토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3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일괄타당성 조사 실시
사업자 지정절차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사업계획 검토·평가 ↓ 협상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 실시협약 체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단계에서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 하여 이후 협상 등의 절차 이행 기간을 대폭 축소  * 리스료 산정모델, 표준실시협약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제시

□ BTL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민간투자 대상 시설을 학교 등 9개 시설로 확대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안에 추가되는 시설 : 국·공립 학교, 관사 등 군인 주거시설, 공공건설임대주택,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문화시설

○ BTL 방식을 활용하여 국·공립학교 시설을 조기 공급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국립대 기숙사, 초·중등학교 校舍 등 국·공립학교의 시설 확충이 긴급하나 재정여건으로 인해 투자 지연

\* 현재 예산 수준(연평균 2,500억원)으로는 30년 이상 노후된 초·중등 교사 증·개축에 20년 이상 소요

○ BTL 방식을 활용하여 군인아파트 신축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군인 주거환경을 개선

\* 현재 군인아파트 37%가 시설이 협소하거나 노후화되었으나, 현 예산상황(중기계획)으로 09년에야 개선 완료 전망

□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가 곤란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BTL과 유사한 임차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시설을 사학재단이 일정기간 임차하고, 기간 만료 후 소유권을 사학재단으로 이전하는 방식 허용

\* 현행 법령은 校地 내 학교설립주체가 아닌 타인소유 건축물을 들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민자유치 곤란('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고등학교 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

□ 05년 상반기중 세부사업 확정 및 사업자 지정절차를 완료하고 05년 하반기중 사업착수 추진

## (2) SOC 조기 확충

### □ 기존 민간투자사업 조기추진

- 현재 추진중인 3개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여 금융자금 또는 연기금을 유치
  - 05년 상반기중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자금을 투입하고, 재정절감분은 계속사업에 집중 투입하여 공기 단축
  - \* 대상사업 확정(04.11) : 부산-울산, 여주-양평, 무안-광주 고속도로
- 민간제안 도로사업 조기 추진
  - 민간이 제안한 사업 중 노선간의 경쟁을 통하여 우선추진 사업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추진
  - \* 우선추진 사업은 당초 2~3개에서 5~6개로 확대

### □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민자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05.1)
- 도로공사와 연기금이 공동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해 도로건설시 통행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05.1)
- 생산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을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05.1)

### □ 최저가낙찰제는 최근의 건설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초의 확대계획\*을 조정하여 추진

\* 현행 500억이상 PQ공사 → 05년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

- 내년 하반기에 건설경기 회복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대시기·대상규모 등을 검토

### (3) 임대주택사업 활성화와 안정적 주택공급

#### □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

-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04.11)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 법령을 05년 1/4분기에 제·개정 추진

\* 종부세법 시행령 제정,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조특법 개정 등

- 대형 건설사, 연기금·REITs 등 재무적 투자자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추가 지원방안 강구

- 재무적 투자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정책을 홍보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

- 적정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택지공급가 인하, 세제지원, 미분양 주택 임대사업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로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기여

- 소요택지 1,000만평(수도권 500만평) 중 미확보된 택지 325만평을 1/4분기중 지구지정하여 차질없이 확보

-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건설지원협의회등을 통해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 마련

-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 등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자체 참여유인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 강북 재개발,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가속화

- 강북재개발 1차 시범 3개지구(은평·길음·왕십리)는 단지조성 및 건축공사 본격 시행(3개지구는 04년 기 착공)
  - 2차 12개지구(한남, 아현, 전농 등)는 개발기본계획 확정 완료(04.12~05.3)후 후속사업 조속 추진
    - \* 시범지구는 08년까지 3.3만호, 2차 지구는 12년까지 13.6만호 공급
- 판교·아산·파주 신도시 건설을 본격 추진하고 김포 및 수원 신도시 건설을 지속 추진
  - \* 판교·아산·파주 신도시는 05년 상반기 착공
  - \* 2010년까지 5개 신도시에서 13만호의 주택공급

□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52만호의 주택건설(분양 37만호, 임대 15만호)을 차질없이 추진

-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1,300만평 공급 및 1,500만평 신규 지정

□ 주택신보 보증공급 확대 및 투기억제제도의 합리적 운영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시 신용보증 확대를 통해 주택 수요 창출
  - \* 주택신보 보증공급 규모 : (04년) 4조원 → (05년) 7.5조원
- 개발이익환수제 시행(05 상반기)과 함께 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주택시장 안정 기조하에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의 선별적 해제 추진



### 3. 가계·중소기업 대출의 연착륙 도모

-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도하고 만기구조를 장기화
  -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가계대출의 적정 증가세와 주택담보대출의 원활한 만기연장을 유도
  - 장기주택대출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한도를 상향조정(2억원→3억원)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운영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지속 추진
  -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적 절차(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기존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활성화
  - 금융권에서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유도
    - \* 현재 금융권에서 배드뱅크(04.11월 하순 운영 종료)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공동추심하는 방안을 협의중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중소기업 자금애로를 해소하면서 중기 대출의 연착륙을 지원
  -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신속히 파악할수 있는 종합지표를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개발하여 운용
  -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중소기업 대출 축소를 방지하고 원활한 만기연장과 만기구조 장기화를 유도
    - \* 신·기보 보증서 만기를 장기화(3·5년)하여 05년중 전은행으로 확대
  - 네트워크론 운용금융기관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 납품대금 회수를 적극 지원
    - \* 05년 상반기중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예정
    - \*\* 세제지원, 총액한도대출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

### Ⅲ. 양질의 폭넓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 1.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 (1)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중소기업 신용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해 기업CB를 설립하고, 중소기업보유 기술평가를 활성화
  - 공공기관 R&D예산 중 5%이상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기술혁신지원제도 확대(04년 6,043억원→05년 6,300억원)
- 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정부는 법무·회계·컨설팅 등 경영지원회사 Network를 구축하고 경영지원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05.4)
    - 중소기업은 쿠폰을 저가(정부지원 60%, 05년 예산 150억원)로 구매·이용하고 쿠폰구매 비용의 7% 세액공제
  - 소규모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정보화서비스를 받는 ASP방식 이용비용의 7% 세액공제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 창업·기술기업 및 시설자금, 무역자금 등 중점지원부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증공급을 확대
    - \*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을 07년까지 50%로 확대
  - 다만, 중장기적으로 고액·장기보증의 점진적 감축 등을 통해 전체적인 보증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
    - \* 보증규모(연간공급, 조원): (03실적) 42.2 →(04계획) 42.0 →(05계획) 41.0

## (2) 벤처기업 활성화

-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05년이 “벤처 활성화 원년”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
  - 벤처기업의 진입·퇴출이 시장원리에 의해 활발히 일어나도록 벤처캐피탈, 코스닥 등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
-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을 지원하고 정직한 실패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패자부활시스템을 구축
  -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을 조성하여 민간 투자가 취약한 창업·지방 벤처기업 등에 투자
    - \* 05~08년까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투자회수자금 6천억원과 정부예산 4천억원으로 조성하여 운영
  -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제한은 완화\*하되, 퇴출요건을 강화하여 벤처캐피탈시장의 건전성을 제고
    - \* (예) 창투자설립 요건 중 납입자본금 요건(100억원 이상)은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전문인력확보 요건(3인 이상)은 탄력적으로 적용
  -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자는 재기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협회, 신·기보 평가를 거쳐 신규보증 등을 지원
-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벤처기업 관련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자금·입지·판로 등을 지원
  - 기보를 중심으로 벤처기업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벤처기업의 정보유통을 활성화
  - 기보를 창업·벤처보증 전담기관으로 하여 3년간(05~07년)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

- 대기업의 벤처기업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범위 확대
  - \* 현재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30%미만을 출자할 경우에 예외 인정
- 대학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의 신기술제품 및 소프트웨어 수요기반을 확대
- 벤처기업의 성숙·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제3시장 등 투자·회수시장의 거래를 활성화
  - 상장요건을 개선해 거래소는 대형·우량기업 중심시장으로, 코스닥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시장으로 차별화
  - 코스닥시장의 가격변동폭과 거래대상 유가증권을 거래소 수준으로 확대하여 시장의 역동성 제고
    - \* 가격변동폭 : 전일종가대비  $\pm 12\%$  →  $\pm 15\%$
    - \* 거래대상 : 주식 → 회사채,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추가
  - 코스닥상장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코스닥 신규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연, 주식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소액주주범위 조정 등
  - 코스닥의 한계 기업이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퇴출 유예기간을 단축(자본잠식의 경우 1년→6월)하는 등 제도 개선
  - 제3시장의 거래대상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제3시장 개편
  -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교환 절차 및 증권거래법상 합병심사 요건을 간소화

### (3) 부품·소재 산업 육성

- 수출과 국내투자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추진
  - 부품소재T/F팀을 중심으로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3개 산업의 10대 핵심품목 발전전략 수립
  - 수요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간의 협력투자사업 지원
    - 대·중소기업간의 협력약정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수급기업투자펀드\*」를 조성
      - \* 부품소재기업 발행 회사채를 펀드로 묶어 유동화하는 방안 등 검토
    - 수요기업-부품소재기업-정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R&D 주체간 공동기술개발 추진
  - 부품소재특별법 개정을 통해 부품·소재 지원체계를 쇄신
    - 부품·소재 통합연구단을 부품·소재 산업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기술·인력·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국내 산업기반이 미약하고 자체개발에 한계가 있는 부문은 외국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노력 강화
  - 일본 부품소재기업 유치를 위해 설치(04.2)된 Japan Desk를 통해 05년까지 30건 이상의 투자를 유치
    - \* 일본 노무라 종합 연구소와의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정밀기계, 조선 부분 등을 집중 유치
  - 수요기업과 부품·소재기업이 공동으로 투자유치 목적의 EU, 미주, 아시아 등 주요 권역별 로드쇼 추진

## 2. 개방과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1) 기술혁신형 성장전략 추진

#### □ 핵심인력 양성 및 기초과학 진흥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 우수 이공계 인력 육성과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05.12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 공공기관의 「이공계 전공자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여 상반기중 적용대상기관, 채용목표비율 등을 확정·권고
- 산업계 중심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여 수요지향적 인력 양성
  - \* 산학협력중심대학(04.10월 13개대 선정)에 R&D장비,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04~08년간 총 2,000억원 지원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설립(05 상반기) 추진 등 기초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강화

####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본격 추진

- 차세대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차세대 신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선도
  - \* 신기술의 국제표준화 : 03년 62개 기술반영→08년까지 300개 기술반영
-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과 정부구매 등 초기시장 창출로 차세대 산업 등에 대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 유도
  -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05년 상반기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
- 기술혁신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연구투자를 지속 확충
  - \* 정부R&D예산중 기초과학연구 투자비중(%):(04)20.4 → (05)21.7

□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유인제도 개선

○ 정부 R&D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 제도 개선

- 참여기업에 적용되는 의무부담비율(50%→기초단계사업은 중앙행정기관장에 위임)과 대기기업의 현금투자비율(30%→15%)을 완화

\* 정부R&D사업의 단계별 민간참여비율(03): 기초(1.2%), 응용(9.2%), 개발(89.6%)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

○ 각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합(7개→2개)·간소화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

\* 05년 중 과기·산자·정통·환경·건교부의 관련법령 개정 추진

○ 정보통신장비에 대한 투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허용(05.1)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확산 및 사업화추진

○ 대형프로젝트중 단기간내에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고 실용화 방안 강구

\* 한국형 고속열차 등 후보과제 검토(05 상반기)

○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종합계획」 수립(05 상반기)

- 기술가치 평가기반 확충(평가기법 개발 보급 등) 및 가치평가 수요 확대(국가R&D사업의 기술가치 평가 강화 등)

○ 대덕 연구단지를 실리콘 벨리와 같은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 R&D기업유치 등 종합적인 육성방안 마련

\*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정 등(05 상반기)

## (2)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 주재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 신설(05.1/4)
  -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해대립이 심한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을 포함하여 분야별 경쟁력 강화대책의 협의·조정애 중점
    - \* 구성(안): 국무총리(위원장), 관련부처 장관 및 국조실·청와대 관계자 등
    - ※ 이와 관련,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재경부(차관보) 주관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 실무추진단(가칭)’ 구성 추진
-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등 정책적 지원제도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
  - 서비스수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04말 예정)를 바탕으로 무역금융 및 수출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05상반기)
    - \* 非신용장방식 수출, 물적 담보 부족 등 서비스수출의 특성을 반영하여 무역금융 및 수출신용보증제도 개선 추진
  - 상품수출과 같이 매월 「서비스수출 동향」을 분석·공표
    - \* 현재는 매월 收支 위주로 서비스교역통계 공표(韓銀)
  - 서비스업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세 稅부담 경감(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예)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Public골프장 용지와 관광유원시설 중 야외 식물원·동물원 등의 토지는 현재 종합합산 과세(0.3~5%)되고 있으나, 이를 저율 누진과세(0.3~2%)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전환



- 주40시간제 확산에 따른 관광·레저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인프라 확충
  - 복합관광레저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
    - \* 05년 중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제정·개발구역지정 등을 추진
  - 건전한 여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도서관·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
  - 골프장 특소세를 지방세로 이양, 지자체가 골프장 유치와 연계하여 세금감면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추진
  - 韓流를 관광객 유치와 문화산업 해외진출에 적극 활용
    - \* 문화컨텐츠수출정보시스템(CEIS) 확대 개편 등 추진
  
- 사회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점 추진
  - (보육) 영유아보육·교육에 대한 전국실태조사(04.9~05.2)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육발전계획」 수립(05 상반기)
  - (의료) 「의료서비스산업·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등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 (법률) 「법률서비스경쟁력강화 T/F」를 활성화하여 법률 시장 개방 대응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 (교육) 교육의 국제화·개방화를 촉진하고 대학의 구조 개혁 및 자율화 추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 「교육과정공동운영규정」 제·개정 (05 상반기)
    - \*\* (가칭)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05)하여 대학의 M&A 촉진, 퇴출경로 마련
  - (실버) 상반기 중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 추진계획 마련하고, 『실버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 (3) 농어업의 체질강화

- 쌀협상에 따른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양정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쌀농가의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확충
  - 현행 추곡수매제를 시가수매·시가방출방식의 공공비축제로 개편
    - 고품질 쌀생산 및 유통을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 (RPC: Rice Processing Complex) 등 민간유통기능도 대폭 활성화
  -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목표가격(17만원/80kg)과 산지가격과의 차이의 80%를 직접지불로 보전
- 농업경영체의 활성화 및 농업·농촌투자 유치노력 강화
  - 13년까지 20만호의 정예 선도농가(쌀 선도농가 7만호 포함)를 중심으로 경쟁산업화
  - 협동조합간 공동사업법인 설립 촉진 등을 통하여 규모화·전문화된 농산물유통주체 육성
  - 사람·자본의 농촌유치를 위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으로 농업 R&D와 부가가치 제고
  - 농지유통화 정보제공, 수탁관리·매입·비축을 주기능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 도입
  - 영농·영어 비용 절감을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시한을 2007년 6월말까지 2년간 연장(연간 조세지원액 2조원)
- 고품질 우수농수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수출농어업 육성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정립하고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범위를 확대
  - 브랜드전시회 등 판촉강화와 한류마케팅을 통한 수출증대

#### (4) 친환경적·자원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 □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의 본격 추진

- 총량제 대상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조사(04.9~05.8) 및 배출권 거래 참여 사업장 시범사업 실시(05.1~05.7)
- 저공해차 보급기준 고시 및 보급 시행계획 마련
-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 CNG 등) 엔진 개조사업 본격 추진
  - \* 대기환경개선목표, 대기오염저감계획 등을 포함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05~14년)을 수립할 예정(05.5)
- 유로 IV형 경유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05년에 한해 50% 감면(2000cc이하 5% → 2.5%, 2000cc 초과 10% → 5%)

##### □ 05년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수송용 유류 상대가격비를 0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조정

- \* 교통세법, 특별소비세법 개정 추진(05 상반기)
- 휘발유:경유:LPG부탄 가격비를 100:85:50(07.7)으로 조정
  - \* 당초 개편 목표 = 100:75:60(휘발유:경유:LPG부탄)
-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버스, 화물차 등 운송업계 부담 완화

##### □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응하여 종합대책을 수립(05.2)

-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관리·에너지다소비업종의 배출 산정 지침 개발(05 하반기)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반 확충

##### □ 고유가시대에 대비하여 석유 정부비축량 확충, 해외유전 개발 등 석유수급의 안정성 제고

- \* 정부비축량(백만 배럴) : (04) 72.3 → (05) 78.6(6.3백만 배럴 확충)
- \* 원유 자주개발율(해외유전개발 공급량/총수입량, %) : (04) 4.1 → (05) 5

□ 고유가의 고착화에 대비한 자원절약형 경제시스템 구축

○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05~07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연 2천TOE이상)에 대한 3년 주기의 에너지진단 의무화(05 하반기)

- 자발적 협약 체결 사업장 확대(04년 1,036개 → 05년 1,200개) 및 예산·세제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확충

\* 예산지원 확대 : (04) 987억원 → (05) 1,116억원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 (04) 7% → (05) 10%

- 산업단지 개발, 도시개발 및 에너지 개발사업 등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확대

\* (현행 민간사업의 경우) 연간 1만TOE이상 열·연료 또는 연간 4천만KWH이상 전력 → (확대) 연간 5천TOE 이상 열·연료 또는 연간 2천만KWH이상 전력

○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과 시장창출을 위한 보급 프로그램 개발

- 해상풍력 개발,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프로그램 추진, 복합건물에 대한 태양광설비 보급 강화

○ 에너지 저소비형사회 구축,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등을 위한 에너지 특별회계 세입원 확대방안을 강구

- 05년 중 차입, 부과금조정 등을 통해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

□ 친환경적·자원순환형 생산·소비체계 구축

○ 환경 산업·기술지원 및 친환경상품 구매·판매 지원 등을 통한 친환경적 경영체계 구축

○ 건설폐기물 감량·재활용 활성화,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품목 확대(04년 16개 → 05년 18개)

### 3. 능동적 대외개방과 해외진출 강화

#### (1) FTA와 DDA협상을 통한 능동적 대외개방 추진

- 다수국가와의 FTA를 적극 추진하되, 산업별 구조조정 방안도 함께 수립하여 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 한·일 FTA는 05년내 타결을 목표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가 되도록 하되, 제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개방정책을 수립·추진
  - 제조업부문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ASEAN과는 05년초 협상을 개시하여 2년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
  - 05년 초 EFTA\*와 협상을 개시하고, 05년 중 멕시코, 인도, 캐나다 등과 공동연구를 완료한 후 협상개시 여부를 검토
-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04.7월 Framework 타결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DDA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과 공조를 강화
  -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등 주요 분야별로 유사 입장국과 공조하여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
- 농업·제조업·서비스업 산업별로 대외개방에 따른 영향분석과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략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대외개방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 특히, 서비스 산업은 상반기 중 DDA 협상에서 개방요청이 있었던 40개 업종에 대한 규제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

## (2)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 □ 업종별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마련

- 주력산업, 차세대 성장동력,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업종별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의 수립
- R&D센터, 부품·소재 및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등 고부가 가치형 투자프로젝트의 집중적인 유치

###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SOC등 완공에 장기간 소요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최초 외국인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다면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생하는 증자에 대해서도 감면결정 효력 인정
  - \* 현재는 증액투자분에 대해서는 증액투자와 관련된 조세감면 신고시 마다 조세감면 해당여부를 판단
- 생산공정을 수반하지 않는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 서비스업 관련 R&D투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부여

###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SOC분야 외국인투자 적극적 유치

-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SOC 분야의 사업 방식을 확대
  - \* (현행) BTO(Build Transfer Operate), BOT(Build Own Transfer) 방식 → (개선) BOO(Build Own Operate),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 추가
-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은 SOC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최소자본금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검토
  - \* (현행) 사업시행자 자본금이 총민간투자비의 20~25% 이상이어야 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입지지원제도 개선

-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통합·운영하고 입주가능 업종을 종전의 제조업 이외에 물류업까지 확대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기업도시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법인세·소득세 3년 100%, 2년 50% 감면)

□ 외국인투자 관련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 04년 초에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투자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 \* Invest KOREA의 투자환경 설문조사(04.10) 등을 토대로 물류·R&D 및 다국적기업 유치에 필요한 과제를 추가 발굴

□ 성과 지향적인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전개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부처별·지자체별 유치활동 점검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기준과 도착기준으로 구분하여 점검
- 유치활동 내실화를 위해 각 부처별 05년 외국인투자유치 계획을 외국인투자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05. 1/4)
- 각부처·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Invest KOREA의 지원활동 강화
  - \* 공동 프로젝트매니저제도를 적극 활용해 프로젝트정보의 공유를 촉진

□ 국가 이미지 제고등 외국인투자 관련 IR활동 강화

- 상반기중 국정홍보처·지자체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가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고, 홍보 관련기관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APEC 정상회의(11월), 세계華商대회(10월)등 '05년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투자 IR 기회로 적극 활용

### (3) 동북아 경제중심의 본격화

#### □ 경제자유구역 1단계 개발과 외자유치 가시화

- 외자유치 가시화와 경제자유구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
  - Gale社\*, AMEC社\*\* 등 기 체결된 MOU에 대해 최종계약을 가시화하고 개발 가속화

\*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167만평)에 127억불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04.11 착공

\*\* 인천공항 북측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20억불 투자 MOU 체결(04.4)

- 청라지구에 세계적 Theme park 유치, 중국내 우수기업과 투자 MOU 체결 등 신규투자 발굴
-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Image making을 위해 재경부, 3개 경제자유구역청, 토지공사 등 공동 홍보노력 강화

\* 업종별 전문지 광고 게재, 홍보브로셔 제작, 경제단체·회원사에 공동 IR 등

- 인천공항 제2연륙교를 착공하고(05 상반기),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 국고지원을 통한 조기완공 추진
- 경제자유구역청별로 기본운영계획을 작성, 자율성·조직 효율성을 확립하고 3개청간 특성화 도모(05.1/4)

####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 해외 우수 교육·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작업 마무리(상반기 중)
- 선진 외국 우수 사립학교들을 유치하고(상반기 MOU 체결), 세계 일류 의료기관과 합작병원 설립·운영에 관한 후속협상 추진
- 공문서의 외국어 발간·접수·처리 서비스 제공(05.1월부터)



□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우선과제 역량 집중

- KIC의 설립 연기금의 외부위탁비율 제고와 퇴직연금제 도입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에 기초한 금융허브 토대 확립
-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채권시장 활성화, 통합거래소 체제의 정착, 외환거래제도 개선 등 추진
- 금융규제시스템 혁신을 위한 금융관련 법령체계 개편 추진 및 시장친화적 금융감독 행정의 구현
- 외국계 금융그룹 지역본부 유치를 위하여 현재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규제를 완화

□ 동북아 물류중심 기반 구축

- 국제경쟁력 있는 물류전문기업 육성
  - 운송·보관·하역 등 3개 이상 물류업을 영위하는 물류전문 기업에 종합물류업 인증 부여(05 상반기 인증기준 등 법령정비)
  - 종합물류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 지원방안 강구
- 공항·항만 배후부지에 세계적인 물류기업 유치
  - 일본·동남아·유럽에서 투자상담회 개최 및 한중 투자수익 모델 개발 등 투자유치활동 지속 전개(05 상반기)
- 한중일 동북아 3국간 물류분야 협력사업 추진
  - 한·중물류협력회의를 구성하여 물류표준화와 아시아 물류표준 통합체계 구축방안 강구(05 상반기)

#### (4) 해외진출 지원 강화

##### □ 해외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적 지원

- 산유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진출 확대 방안 마련(04.12)
  - 전세계를 5개 거점지역으로 구분\*, 중점 진출대상을 선정 후 거점 지역별로 특화된 수주 확대전략 마련
  - \* 중동·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중국, 서남아시아, 러시아·CIS, 중남미
-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해외진출기업 역량 제고
  - 수출입은행 자본금 증자(5천억원), 여신한도 확대를 통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가능한 여신규모를 확대
  - 수출보험공사의 자원·시장개척 관련 보험지원을 강화하고, 사전 제작자금 지원에 대한 보증제도 도입
  - EDCF 재원 확충과 함께 지원금리 인하, 절차 간소화 추진
  - 수출입금융채권 발행(5천억원), 이익참가부채권의 발행을 통해 국내 여유자금의 참여 유도
- 수주확대를 위한 지원여건 개선
  - 정부투자기관내 프로젝트 기획·개발전담조직 신설 및 관련업체간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공동진출을 적극 추진
  - 수주 유망지역에 민관합동 실무조사단 파견
- 「해외진출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해결

## ① 해외 플랜트 수주 확대

- 금융·마케팅 지원\* 강화와 인력·기술정보 인프라\*\* 구축

\* 제작금융보증제도 도입(05.1/4),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 수주단 파견(05.1/4) 등

\*\*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양성사업(04~09), 부문별 엔지니어링·기술개발과제 로드맵 마련

- 중소형 플랜트 업체, 기자재 업체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 ② 해외건설의 활성화

-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05 하반기)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를 활성화하여 해외진출 의욕고취

- 해외건설 정보망을 확대하고, 건설협력기반을 구축

\* 브라질, 칠레와 양해각서 체결(기체결 : 14개국)

## ③ IT 해외진출 확대

- DMB, WiBro 등 IT839 성과의 글로벌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여 국제표준화 등 세계시장 선점을 적극 추진

- 민관 IT수출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동북아 3국간 IT경제 협력 기반을 ASEAN·중남미·유럽 등으로 확대

## ④ 국제해운협력 등을 통한 국적선사의 해외경영여건 개선

- 외항상선의 톤세제 도입으로 해운선진국 수준의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하여 선박확보 기회 확대

- 국제해운협력 강화로 신규항로 확충 및 해외진출 확대

\* 브라질, 인도와 해운협정체결 추진(05 하반기, 기체결 : 15개국)

##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 05년 중 60여개의 세계일류상품 추가 발굴과 마케팅 지원

- \* 세계 일류상품(개) : (01) 120→(02) 281→(03) 353→(04) 440→(05) 500
- \* BRICs 등 유망성장시장에 세계일류상품전(연2회) 개최

### ○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확대(05년 150억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인수규모 확대(56조원→69조원)

### ○ 서비스 수출증대를 위해 KOTRA 내 'IT·문화수출센터', 'IT수출진흥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고, 해외전시회 및 시장 개척단 지원 확대

### ○ 외국의 수입규제 증가에 대응하여 수요자 맞춤형 통계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확대

-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첨단제품(휴대폰·반도체·PDP 등)에 대한 비관세 무역장벽을 조사하여 전략적으로 대응

## □ 권역별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 ○ 선진국은 유명 전시회 참가위주로 지원하되, 틈새시장 개척

- \* 전자(Cebit), 섬유(Texworld)등 분야별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 \* 美 정부조달박람회 참가 등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

### ○ 개도국은 지방중소기업 위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BRICs 등 신흥성장시장 중심으로 한국상품 전시회를 개최

- \* 기계·섬유 중소기업 등 업종별 시장개척단 위주 파견
- \* BRICs시장의 수출유망품목을 조사하여 정보제공(무역협회, KOTRA 등)

## (5) 양자·다자간 경제협력 강화

### □ 미국, 러시아, 중국·일본 등 주요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 한·미 양국간 정부와 민간경협 채널을 활성화하여 통상압력 강화에 사전 대비하고, 투자확대를 도모
-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한·러 공동위원회, ASEAN+3 회의 등 주요국과의 양자간·다자간 협력채널을 최대한 활용

### □ 개도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EDCF 활성화

- 기금재원 확충과 금리 인하 등을 통해 EDCF사업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와 우리기업의 개도국 시장진출을 지원
- 수원국과의 정책협의 활성화·집행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EDCF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 □ 에너지·자원(CIS, 중남미), IT(인도), 인프라(베트남) 등 지역별·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제협력을 추진

- \* 동시베리아 유전 공동개발(러시아), 한국 H/W·인도 S/W 결합을 통한 협력사업(인도), 하노이 신도시개발 프로젝트(베트남), 자원협력약정(브라질) 등
- 특히, 04.5월 25개국으로 확대되어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증대된 EU와는 투자, 산업·과학기술협력을 강화
- 또한, 인도·중남미 등 경제협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국가의 경우, 공동연구 등을 통해 효과적 협력방안 모색
- \* 한-인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 공동연구,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협정 공동연구 등

- 05년 APEC 정상회의와 재무장관회의 성공적 개최
  - 제안사업의 적극적 발굴 등을 통해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대한 홍보기회로 활용
- 회원국 자격으로 처음 참석하는 IDB 연차총회(05.4)를 중남미국가와의 파트너십을 증진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
  - IDB와의 Co-financing, IDB 주관 기술지원사업 참여 확대 등 IDB를 활용한 중남미시장 진출 확대 방안 강구

#### (6) 남북경협 활성화

-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성공단을 남북간 분업생산의 성공 모델로 개발
  - 1단계사업(100만평) 본단지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 상반기부터 단계적인 분양에 착수
    - \* 시범단지(2.8만평)는 15개업체가 입주를 완료하여 본격 가동
- 남북교류 촉진 및 동북아 물류중심 구축을 위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구간 연결을 완료하고 개통
  - 나아가 대륙철도 연계를 위해 남·북·러 3자 회의를 통한 북한철도 실태조사, 경제성 분석 등 공동연구 추진
- 민간차원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당국간 협의채널을 통해 청산결제 본격 실시 및 상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남북교역 활성화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당국간 협의를 통해 남북경협협의사무소도 조속히 설치

## 4. 경제시스템 선진화

### (1) 규제개혁 가속화

#### □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정비

- 04.8월 신설된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기 선정된 60개 전략기획과제에 대한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

\* 분기별로 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 정비방안 확정

- 1단계(04.9~05.8) : 물류·유통, 건축·건설, 기업투자환경, 국민편의, 서비스분야 등의 덩어리 규제 정비
- 2단계(05.9~06.8) : 금융·세제, 정보통신·방송, 노동·산업안전, 공정경쟁·환경 등의 덩어리 규제 정비

- 각 부처도 기존 규제 정비계획(05.1월 확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개별규제 정비

#### □ 04년에 확정된 덩어리규제 정비방안들을 차질없이 시행

-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
- 기업의 행정조사 요건 및 절차를 투명화하고 기업자율조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칭)행정조사기본법 제정
- 대형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심의회와 통합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개선
-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공장설립 가능지역”이 전국적으로 동시 지정될 수 있도록 부담금감면 등 지원방안 강구

□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투명화·전산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05 상반기 입법완료, 06.1월 시행)

○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용도지역·지구의 신설을 제한하고 각 부처는 토지이용규제 지정 및 운영실태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

○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 지정시부터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주민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의무화

- 지역·지구 지정 및 경계설정기준 및 지적고시\* 절차 마련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에 지역지정현황을 표시, 고시하는 제도

○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 단순 열거식 토지규제정보를 종합적·입체적으로 포함된 규제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메뉴얼식 규제안내서\* 작성

\* 공장, 창고 등 개발행위시 신청부터 준공까지 사업단계별 절차, 허가에 필요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안내서

□ 규제심사·평가를 강화하여 규제 품질 및 투명성 제고

-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영향분석(규제 필요성, 대체수단 유무, 규제의 비용·편익 등을 비교·분석)에 의해 철저히 심사

- 05년부터 매년 부처별 규제개혁 노력·실적, 국민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공개



## (2) 금융시스템 선진화

### □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

-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영업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투자은행(IB)으로의 성장기반을 마련
  - \* 증권사에 대한 신탁업겸영 및 신용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을 허용
- 사모전문투자회사(PEF) 활성화, 퇴직연금제도, 연기금 자산운용 다양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산업을 육성
- 불공정거래 해소 노력을 강화하고 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
-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업종특성·규모 등이 감안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를 도모

### □ 보험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여 경쟁력을 제고

-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 개발과 실버타운 건설 등을 통하여 실버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
- 2단계 방카슈랑스(05.4)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은행 등의 불법모집을 철저히 감독하는 한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 예 : 은행 등의 특정보험사 판매비중제한 강화 등
- 보험사의 유·무배당 상품간 손익배분과 자산·부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산구분계리의 합리적 시행방안 마련

-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와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개인 CB를 활성화
  - 경쟁력있고 기술있는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선별될 수 있도록 기업CB 설립\*을 추진하고, 기술평가를 활성화\*\*
    - \* 05년초 기업CB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제공
    - \*\* 기보의 기술평가단(04.7월 설립)의 평가인증서를 05년부터 외부에 발급
  
- 현행 업종별 금융법 체제를 기능별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 금융법 작업\*의 세부추진일정을 05년 상반기중 마련하여 추진
  - \* “진입·업무영역”, “금융거래”, “자산운용 등 감독”, “퇴출” 등 4대 기능별로 개편
  - 금융혁신이 촉진될수 있도록 현행 규제방식을 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
    -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고 금융전반의 중복·차별적 규제를 철폐
    - \*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데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금융의 검엄화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출범과 함께 현행 거래소시장·코스닥 시장 등이 시장특성에 맞게 차별화될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금융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
  -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05.1월 국회 제출 예정

### (3)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

####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 추진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를 확대\*하고 상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관행 개선추진
- \* 조사대상업체 : (04) 4 → (05) 5 → (07) 7만개
- 하도급법 적용분야를 서비스업분야로 확대
-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관행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소자본창업자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분야 공정화를 추진

#### □ 대기업집단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등의 인센티브로 활용
  - 졸업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
  -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예외인정 확대를 통해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유도
-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사항 구체화 등 공시제도 보완

#### □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

- 경쟁제한적 예규·고시 등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카르텔 면책제도 개선,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조정(5→10%)에 따른 엄격한 법집행 등 카르텔 억지력 제고
- 신고의무 대상 조정 등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합리적 개선

#### (4) 공공부문 효율화

##### □ 재정부문의 효율성·건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 단년도 위주의 재정운영을 중장기적 시계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재정운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정
  - ① 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국회제출
  - ②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및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 ③ 추경편성요건 구체화 및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우선 상환 의무화
- 정부내 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외부자금 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회계별로 구분 관리되고 있는 국고금을 통합관리(05.7시행)
- 정부회계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추진
  - 05년부터 시험운용을 실시하고, 정부회계법(가칭)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

##### □ 재정관리시스템의 정비 및 활성화

-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에 축적된 자료를 정보·지식으로 전환하고 재정정보 분석·평가기능을 활성화
- 기금존치평가결과(04.8)를 바탕으로 유사기금의 통폐합 등 기금정비에 관한 정부 최종안 마련
  - \* 05년 상반기 중 정부안을 확정하고, 법령개정을 추진
- 국가채권관리에 대한 각 중앙관서별 성과평가를 실시(04회계년도 결산)하여 국가채권관리의 효율성 제고

□ 공기업·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본격 추진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토대로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공개를 실시하고, 고객만족도\*를 조사·공표

\*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75개) 대상

-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 운영

\* 기관장 혁신 연찬회, 혁신 성공사례별 토론회 개최 등

□ 재정자금의 효율적 조달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국채 시장의 활성화 추진

- 국채 발행물량 증가에 대비한 수요기반 확충과 유동성 제고를 위해 05년중 국채 Strip 제도\*를 도입

\* 국채의 원금과 이표를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장기 국고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심 지표채권의 장기화를 지속 추진하고 10년 초과만기 장기국채 발행을 검토

□ 국유지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고 국유지의 활용도를 제고

- 지자체 위임관리 중심의 국유지 관리체계를 민간 전문 기관 위탁방식 중심으로 전환

- 위탁 국유지에 대한 건물신축 허용, 국유지 개발 및 비축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국유지의 활용도와 가치를 증진

- 관리실태의 전면 점검과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국유지 발굴을 위해 잡종지 70만필지에 대해 3년(05~07)간 전수조사 실시

## (5) 선진적 노사관계의 구축

### □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

- 대화와 타협의 교섭분위기를 조성하고 핵심쟁점에 대한 바람직한 교섭방향을 제시하여 근로손실일수를 최소화

\* 근로손실일수(천일) : (02)1,578 → (03)1,295 → (04)1,192

- 주요 분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체제를 가동하여 대응방향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 □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실업자의 노조가입 문제, 대체근로 제한 완화, 정리해고제한 완화 등

- 노사정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

### □ 노사정위원회가 내실있는 사회적 협의기구로 정착하도록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

\* 일부 노동단체의 불참, 공익위원 역할의 한계, 의사결정 지연 등

- 노사정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을 추진

## (6) 부동산 시장의 합리성 제고

### □ 주택가격 안정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 정착

- 공공택지내 85m<sup>2</sup>이하 원가연동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재당첨 금지 등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보완책 마련
  - \* 주택법 및 하위법령 개정후 상반기 시행
-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EWS)를 활용하여 매월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 및 시장불안 요인에 조기 대응
  - \* 04.9월 구축된 EWS는 부동산(주택·토지) 시장의 1년내 위기(가격 불안)발생 가능성을 5단계로 구분하여 예고
- 각종 개발사업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을 조기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되 가격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
  - \* 투기지역 지정지역(04.12 현재) : 79개지역(주택 39, 토지 40)
  - \* 주택투기지역 해제 : (04.8)부산, 대구 등 7개지역 (04.12)서울 중랑·서대문구, 대전 서구 등 11개지역
- 투기지역내 소형주택 및 공공수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 대신에 기준시가로 양도세 과세(05.1)

###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와 실거래가 과세인프라 구축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질서 확립(개정 부동산중개업법 하반기 시행)
  -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매매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 개인간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액 신고로 취득세·등록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거래세 부담 증가분에 대하여 감면(05 상반기)

□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

○ 재산가액(시가)에 상응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산정기준과 과세방법을 획기적으로 개편(05.1)

① 토지·건물의 과세표준을 실제거래가액(시가)을 기준으로 평가

②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통합과세

③ 복잡하고 급진적인 누진세율체계를 단순하고 완만하게 하며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

○ 주택·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이원화(05.1)

① (1차) 시·군·구 : 낮은 세율로 재산세 과세

② (2차) 국 가 : 전국의 소유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  
일정기준가액 초과분은 높은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방에 이양

- 종합부동산세 세액중 지방세로 과세된 부분은 전액 공제

□ 부동산 거래세를 완화하여 원활한 부동산 거래 유도

○ 부동산 등록세율 3%에서 2%로 인하(05.1)

○ 주택·건물에 대한 개인간 거래는 0.5%p 추가 인하(05.1)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거래세 부담 증가분 감면



## (7) 소비자 주권 향상

- 소비자정책의 중점을 종전의 소극적인 ‘소비자 보호’에서 적극적인 ‘소비자주권 향상’으로 전환
  - 05년 중 중장기 소비자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별 Action Plan을 수립
    - \* 현재 T/F(04.4~)에서 기본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중으로 내년 1/4분기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예정
  - 인터넷 소비자방송 본격 실시, 안전경보(Safety Alert) 활성화 등을 통한 소비자교육·정보제공 강화
-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 추진
  - 사업자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권장기준, 일괄적 분쟁조정 도입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관련 규칙마련 등
- 지방소비자 행정 및 지원 강화
  - 지자체 소비생활센터에 소비자상담 매뉴얼 도입 및 교육 강화, 소비생활센터·소보원·지방소비자단체의 협력관계 구축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 강화
  - 전국소비자상담망(Consumer Gateway)의 상담 및 정보제공 기능강화를 위한 개편
  -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의 불공정약관 및 부당광고, 전자상거래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 5. 국가균형 발전 노력 지속

### (1) 국가균형 발전계획의 차질없는 수행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新수도권 발전방안 추진

○ 신국토구상, 신행정수도 후속조치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새롭게 마련

○ 지역산업과 연관성이 높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묶어서 지역별로 집단이전하고 이와 연계하여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지방의 활력을 제고

○ 공공기관 지방이전등과 연계하여 수도권의 중장기 관리 방향을 담은 「新수도권 발전방안」 추진

\* 서울은 금융·국제비즈니스, 인천은 동북아물류, 경기도는 첨단산업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본격 추진

○ 「제1차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수립(05.2)하여 국가균형발전 시책 구체화

○ 「4개 지역진흥사업\*(2단계)」과 「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별 전략산업중심의 클러스터 구축

\* 대구(섬유,신산업)·부산(부품소재)·경남(기계,로봇)·광주(광산업,전자부품)

\* 대전·충남북(전자,생물)·전남북·제주(자동차,기계,생물)·울산·경북·강원(자동차,전자,생물)

○ 7개 시범단지를 혁신클러스터의 성공모델로 육성

- 클러스터별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미래혁신도시 건설계획’ 등과 연계하여 추진

## (2) 기업도시 건설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04.12.9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도시, 복합레저단지, 혁신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주거·레저 등의 기능이 복합된 자족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 원활한 도시개발 추진을 위해 토지수용권·출자총액제한 등 특례 부여
    - 안정적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의료법 특례 부여
  -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05.1)
- 특별법 시행(05.4) 직후 기업도시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발굴·지원
  - 부담금 감면, 이전기업 종사자의 주택특별공급,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낙후도에 따른 개발이익 차등환수 등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추진
  - 시범사업은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유형(산업교역, 지식기반, 관광레저, 혁신거점)별로 균형있게 2~4개 선정
    - 04.12월말 시범사업 선정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05.2월중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선정할 계획
    - 법 시행 즉시 정식제안을 받아, 05년 하반기 구역지정 실시

## IV.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 1. 교육기회의 확대

- 현행 이차보전방식 학자금 대출(Loan)을 정부 보증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학생에게 학자금대출을 제공  
(05년 상반기중 관련법률 제·개정, 05년도 2학기부터 시행 추진)
- 금융기관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공적 신용보증을 바탕으로 유동화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저리 자금조달을 지원
- 대출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액도 등록금 외에 생활비까지 포함하여 지원
  - \* 대출기간 : 현행 최장 14년 → 최장 20년으로 확대
  - 대출금액 : 현행 등록금한정(2000만원한도) → 생활비 포함(3,600만원한도)
- 기초생활보장가구 대학생 등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 대상별·목적별로 이자율 및 상환기간의 차등화 검토
  - \* 교육부내 부처합동 T/F를 운영(04.12~05.6)하여 논의
- 기존의 무상(Grant) 학자금 제도를 정비하여 국가 과학기술(이공계) 연구개발 장학사업으로 개편
  - \* 학자금 대출제도 개편과 연계하여 구체방안 마련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 저소득층 만5세아(04년 44천명 → 05년 81천명) 및 만3~4세아(04년 22천명 → 05년 32천명) 교육비 지원대상을 확대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확대(04년 8개 → 05년 15개)하여 도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05년 7개교), 농어촌 통학버스 지원 등을 신규 지원(05년 100대)하여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2. 자활능력 배양

### (1) 직업능력 개발체제 강화

-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여 고용기회 및 사회안전망을 제공
  - 고용촉진훈련\*에 차상위계층을 참여시키는 한편, 자활직업훈련\*\*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
    - \* 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노동부 지원(04년 111억원)하에 지자체에서 실시
    - \*\* 현재 노동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
  - 훈련대상자의 특성 및 수준에 적합한 훈련프로그램 개발·제공
  - 훈련수강후 각종 고용촉진장려금,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고용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강화
- 중소기업 근로자, 실업자, 비정규직·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활성화
  -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확대(04년 31개→05년 40개), 현장 출장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참여를 촉진
  - 훈련상담 강화, 취업률 등 훈련성과에 따른 추가지원(훈련비 15%) 등을 통해 신규 및 전직 실업자 훈련의 내실화 추진
  - e-러닝 수강지원금제도 도입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 접근성을 제고
  -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제고를 위해 여성·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파트타임 훈련 프로그램 및 훈련 직종 개발·보급

## (2) 일자리 창출 등 취업지원 노력 강화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존 대책(03.9)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마련·추진 (05.1/4)
  - 진로·직업지도 강화, 직장체험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의 직업관·직업의식 확립에 중점
  - 대학내 취업지원실과 고용안정센터 기능 강화 등 청년 취업지원 인프라를 확충
    - \* 대학 취업지원실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05 상반기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청년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년 취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활성화 하여 청년취업을 적극 지원
-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를 전략적으로 확대
  - 방문도우미 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작년보다 1.4만명 많은 4.1만명으로 확대 (05년 1,513억원)
    - \* 사회적으로 유용하나 수익성이 낮아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일자리
  - 노인 일자리 사업(04년 142억원, 25만명 → 05년 199억원, 3.5만명)과 자활근로사업(1774억원, 6만명 → 2021억원, 6만명)을 확대
- 고용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고용안정센터, 교육기관, 민간기관 지자체의 기능 활성화와 기관간 연계 등 인프라 구축(05.1/4)
  - \* 고용정보, 직업지도, 심층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 실업 급여 등 고용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

### (3) 여성·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 □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유도

-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
-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재정지원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여성 특성에 맞는 취업상담·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 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 시간제 근로 등 여성취업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여성기술인력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을 통한 창업지원 서비스 구축
- 산전후 휴가비용에 대한 사회분담 수준을 확대
  - \* 현재 국가가 부담하는 산전후 휴가 30일을 단계적으로 확대(우선 60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 고령자 고용촉진을 통해 인구고령화에 적극 대비

- 고령자(50세이상)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3년) 없이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고용상의 제한을 완화
-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년 퇴직자 계속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선
- 고령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안정망(work-net)을 구축하고 고령자 취업알선 기관간 연계를 강화

#### (4) 서민·중산층 가계의 부담 완화

##### □ 근로자·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부담 경감

- 종합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 등 소득세율 1%p 인하
  - \* 종합소득세율 : 9~36% → 8~35%
  - \*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 : 10% → 9%, 15% → 14%
- 근로자에 대해 표준공제(60 → 100만원) 확대와 자비부담 직업훈련비용\*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
  - \* 현재 대학교 등 정규교육과정의 수업료 등에 대해서만 공제
- 아파트 관리비·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
  -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계속면제, 국민주택규모 초과: 04년말→05년말

##### □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문의 부담을 완화

- 신용보증방식의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 기회를 확대
- 주택모기지론 확대,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
- 도시가스도매요금(05.1), 건강보험약가(05 상반기) 인하를 추진하고 전기요금은 서민 주택용 등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05 상반기)

##### □ Reverse Mortgage가 활성화하여 노령자 등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05.1)
  - \* 연로자 장기저당 주택은 거주요건 2년 제외, 자녀주택과 분리 등



## (5) 소상공인 · 재래시장 지원 강화

### □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 확대(04 : 3,500억원 → 05 : 5,100억원)
-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05년 1년간 2배로 상향조정(5, 10, 15% → 10, 20, 30%)
- 음식 · 숙박 · 도소매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별적 창업지원책 실시
  - \* 상권분석에 기초한 “소상공인 밀집도지수”를 개발해 사업성평가지표로 활용
- 영세점포의 경영진단, 창업교육 및 컨설팅 병행 지원 등 업종전환에 대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재활지원 기능 강화

### □ 재래시장의 활성화 지원

-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지원
  - 시설현대화 · 환경개선 지속 추진(05년 1,058억원)
  - 선진 상거래방식 도입 및 공동사업 활성화(05년 100억원)
- 수요가 있는 재래시장은 활성화 또는 재개발 추진
  - 시장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공(空)점포율이 낮은 시장에 대해 우선 지원
    - \* (현행) 3,000㎡ 이상 → (개선) 2,000㎡ 이상이고, 50개이상 입점
  - 재개발 추진 중에도 영세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 개설을 지원\*
    - \* 임시시장 개설시 공유지 적극 제공, 사용료 감면
- 시장기능을 상실했거나 침체된 시장은 시장폐지 요건의 완화를 통해 다른 용도로 전환을 유도

### 3. 사회안전망 강화

#### (1) 기초생활보장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탈빈곤 대책의 내실화

- 최저생계비 실제측 조사(04.3~04.10)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도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평균 8.9%)
  - \* (04) 월 106만원/4인(04년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47만명) → (05) 월 114만원/4인(생계비 인상에 따라 약 13만명 추가보호 추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하여 수급대상자 확대(약 6만명 추가보호 추정)
  -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05.7)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05 상반기)
  - \* 자활급여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소액창업대출(Micro-Credit) 사업 지원 등
-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 참여 지속추진(04년 2만명→05년 2만명)

##### □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노인복지체계 조기 구축을 위하여노인요양보험법 제정 추진
- 아동 공부방에 대한 지원을 확대(04년 월67→05년 월200만원)하고, 모부자 가정의 아동양육비 인상(04년 월2→05년 월5만원)
- 05년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대폭 확대
  -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의 1~2급, 3급 중복장애인(04년 14만명)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장애인 전체(05년 27만명)
- 부양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100→200만원)

## (2) 보육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시스템 확충

### □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

- 법정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고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수준의 가구까지 확대(08년까지)
  - \* 05년 법정저소득층, 차상위층, 차차상위층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수준 인상 (100%, 60%, 40%, 0%→ 100%, 80%, 60%, 30%)
- 장애아 무상보육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아 전담시설을 신축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 (04) 4천명→(05) 9천명
  - \*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 : (04) 26개소→(05) 30개소
-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 필수보건의료 국가시스템을 늘려나가고 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

- 응급의료센터, 응급전문의 확충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 SARS 등 신종전염병 관리 체계 구축, 혈액 안전관리 강화
  - \* 예방가능한 응급실 사망률을 2007년까지 20% 이하 감축 (현재 응급실 예방가능사망률은 50.4%, 선진국은 10%대)
-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 국립대학 병원 중심으로 지역암센터 설립 추진
- 시·도립 및 군단위 소규모 치매요양병원 건립 등 노인질환 및 요양보호 기반 구축 추진, 공공의료기관에 한방진료부 설치 등 양·한방의료 협조체계 구축

### (3) 4대 사회보험의 내실화

####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건전성·수익성을 제고

- 비정규직 및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현행 지역 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추진
  - \* 비정규직 및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약 130만명 추산)에 대한 적용 기본계획 수립(05년중)을 토대로 06.1월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실시
-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소득(표준소득월액)등급체계 현실화를 통해 급여수준의 적절성 제고
  - \* 현행 등급체계[(1등급)22만원~(45등급)360만원]를 소득수준·최저생계비 상승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중심으로 상설화하고, 기금운용본부(연금공단)를 투자전문회사로 분리·독립성 강화
- 주식·SOC·해외투자 등 투자대상 다변화를 통해 연금기금의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및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

#### □ 고용·산재 보험 적용확대 및 운영 내실화

- 05.1월부터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 건설업 범위를 확대(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면허업자에 의한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 물가·임금 상승 등을 감안하여 구직급여 상한(현행 3.5만원)을 상향 조정 검토(05.9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연구용역(04.10~05.5)을 바탕으로 적정 적립금 규모 설정, 보험료율 조정 등 고용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

□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정착 및 국민건강 증진 강화

- 적정수준의 보험료·의료수가 조정, 빈틈없는 지출관리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당기재정 수지균형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보장성 확대 추진

\* 건강보험(조원): (01)△1.8→(02)△2.6→(03)△1.5→(04<sup>6</sup>)0.07→(05<sup>6</sup>)수지균형

- 저소득 11세이하 아동 및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신규 적용(18만명)

\* 저소득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적용 : (04) 2.2 → (05) 20.2만명

- 저소득층에 대한 5대 암(위·유방·자궁경부·간·대장암) 무료검진사업 확대(04년 120 만명→ 05년 217만명)

(4)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방안 검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전과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을 위해 근로 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방안 검토

- 05년 상반기중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가능여부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

※ 주요 검토내용 :

-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실태 및 보완을 위한 수요조사
- 외국의 운용사례 조사
- 과다환급 방지 대책과 개괄적인 EITC 도입방안 수립
- 중장기 재정부담 추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

-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제도 개선, 과세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실시 등 추진계획 마련

## V. 2005년 경제운용의 모습

---

- 이상의 정부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과 40만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
  - 소비자물가는 3% 초반으로 금년보다 안정
  - 실업률은 3% 중반으로 금년 수준 유지
  - 경상수지는 금년에 비해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확대되어 연간으로 200억불 수준 흑자 기록

	04년 예상	05년 모습
· GDP 성장률	4.7~4.8%	5% 수준
· 소비자 물가	3.6%	3% 초반
· 실업률	3.5%	3% 중반
· 경상수지	270~280억불	200억불 수준

- 아울러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주요 국정과제들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여
  -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 양질의 폭넓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 첨 부 >

## 부처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 재 정 경 제 부

### □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 종합소득세(9~36% → 8~35%), 이자·배당소득세(10% → 9%, 15% → 14%) 등 소득세율 1%p 인하
  -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2배로 상향조정(5, 10, 15% → 10, 20, 30%)
  -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세는 완화\*\*하여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
- \* 재산가액(시가)에 상응한 과세, 주택·토지 과다보유자 과세 이원화  
\*\* 부동산 등록세율 인하(3%→2%), 개인간 거래는 0.5%p 추가 인하

### □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 금융전반의 중복·차별적 규제를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통합 금융법 제정작업 추진
-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영업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투자은행(IB)으로의 성장기반을 마련
-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CB 활성화 및 기업CB 설립을 추진

### □ 공공부문 효율화

- 재정부문의 효율성·건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국가재정법 제정,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등)
- 국채 Strip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채시장 활성화 추진



## 교육인적자원부

- 지속적인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추진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로 교육수준의 국민최저선을 보장하고 교원의 전문성·책무성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
  - 수준별 교육과정 정착, AP 제도 도입, 속진·조기졸업 제도 운영 활성화 등 학생수준별 교육 강화
  -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사회적 교육욕구 수용을 위한 학교체제의 다양화·특성화 확대
  
- 교육복지 강화로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및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도시 저소득 및 농어촌 지역의 교육 불평등 해소
  -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대학생 학자금 용자 확대로 장애아, 저소득층, 저학력 성인 등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 국가발전을 선도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개발
  - 「대학 구조개혁 방안」 추진으로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특성화를 촉진하고 대학평가체제 개선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
  - 지역발전과 연계된 특성화분야의 우수 인력양성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속 추진
  - 산학협력 전담교수제, 사내대학 활성화 등 산학 협력 활성화
  - 체계적인 e-러닝 지원체제 구축과 e-러닝 활성화를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촉진

## 과 학 기 술 부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 민간은 핵심기술의 실용화와 초기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정부는 제도개선, 규제완화, 인력양성 등의 간접지원에 중점
  - 사업단별 전문평가와 10개 사업단 종합비교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연구비에 반영
  
- 성과중심의 국가R&D사업 추진체제 확립
  - (가칭)「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제정(05 상반기), 과학기술 혁신관련 정책·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체계화
  - 국가R&D사업의 조사·분석·평가방식을 부처별 자체평가, 3-5년 주기의 성과평가 등으로 개선
  
- 핵심인력 양성 및 기초과학 진흥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 우수 이공계 인력 육성·활용 촉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05.12)
  -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공계 전공자 채용 목표제」 도입 추진
  - 첨단 대형연구시설의 지속적 확충,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설립 등 추진(05.6)
  
- 대덕 연구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본부」 설립(05 상반기)
  - 개발사업자 선정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 외 교 통 상 부

- 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 참여 및 FTA 추진
  - DDA협상 의제별 협상, 여타 관련 양자·다자 차원 협의 강화 및 DDA협상 분야별 국내대책반 구성
  - 협상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유망대상국과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 추진 논의
- 2005 APEC 정상회의
  -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역내 거대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및 발전에 이바지
- 우리기업의 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 세일즈외교 강화
  - 국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강화
  - 민간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진출지원 노력 강화
- 주요 교역상대국 및 동북아 경제협력 사업 확대
  - 한·중·일 투자협정 공동연구 등 3국간 협력 제도화
  - 동북아 물류중심화 구축사업 추진 및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제 구축
- 대개도국 공적개발원조사업 기반강화
  - KOICA무상원조 사업비 확대와 이라크, 아프간 재건지원 지속 추진

## 문 화 관 광 부

### □ 문화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

-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을 연계한 문화산업연구센터 설립 추진 및 분야별 공공아카데미 기능 강화
- 국내 개최 견본시 규모 확대 및 전략적 해외유명 견본시 참가지원 강화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 활성화 도모
- DMC내 문화콘텐츠 핵심기반시설 집적화 지속 추진 및 문화콘텐츠 연계 공동제작실 운영 등 창작 인프라 확대
-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로드맵 마련, 부산영상중심도시 및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등을 통한 지역문화산업 기반조성
- 문화산업센터 설립을 통한 한류 지속화 기반마련

### □ 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

- 복합관광레저도시 조성을 통한 관광레저 수요 충족 및 6대 권역·10대 거점별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균형발전
-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지원 및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 대상별, 지역별 관광특화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강화

### □ 스포츠산업의 진흥기반 조성

-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법·제도 마련,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본격 시행
- 스포츠산업분야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용자 확대 시행
- 스포츠·레저산업 공모전 및 시상 등을 통한 민간업체 경쟁력 확대

## 농 립 부

### □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업의 체질 강화

- 추곡수매제를 개편하여 시가수매·시가방출방식의 공공비축제 도입
- 영농규모화 촉진과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농지은행제도 도입
- 젊고 역량있는 영농후계인력 정착 지원을 위한 농업인턴제 등 실시
- 농협법상 조합간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을 촉진하고 APC·RPC의 경영혁신과 통합 등을 통해 기업형 농산물마케팅 조직 육성

### □ 21세기형 선진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新 성장기반 마련

- 농업 R&D 지원 및 기술보급체계를 혁신하고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농식품산업육성방안 마련
-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운영체제를 정립하고 축산물 HACCP대상 확대
- 산·학·관 협력을 통한 농업발전 촉진을 위해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시책 확충

- 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목표가격 설정, 고정형·변동형직불 시행
- 친환경축산직불·조건불리직불제의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본격 추진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시범 도입
-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가영유아 보육비 및 학자금 지원

### □ 도·농교류 및 농촌지역개발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농촌다움과 쾌적함을 갖춘 농촌개발 추진
- 농촌관광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농촌홍보센터 설립

## 산 업 자 원 부

- 수출과 외국인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 세계일류상품 등 새로운 수출동력의 지속적 창출, BRICs 등 수출시장 개척, e-Trade 플랫폼 구축 등 선진 무역인프라 구축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도 조세감면 부여, 외국인투자환경개선 계획의 점진 강화, 인베스터코리아 중심의 유치활동 추진
  
- 성장동력의 지속적 확충 및 기업의 활력 제고
  - 주력산업의 신기술 접목 및 공정혁신, 부품소재 수급기업간 R&D 공동 개발 및 신뢰성 향상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5개분야)의 기술개발 본격화
  - 산학협력중심대학의 활성화, 기술이전 확산 프로세스 정비, 핵심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디자인 허브사업의 확대
  - 저렴한 산업입지 공급 및 복합규제 해결, 원자재의 조기 정보지수 운영, 대중소기업간 인력·기술·판매의 공동사업 확대
  
-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달성
  -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 극대화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에너지수급 체제 구축
  - 국내외 자원개발 및 공급설비 확충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기반 구축
  -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원단위 개선

## 정 보 통 신 부

- 편리한 삶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디지털 강국인 u-Korea 건설을 위하여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화·네트워크화 촉진
  - 재난관리, 기상정보, 국유재산 등 행정 DB 구축 추진
  - 4대 권역(부산, 광주, 대전, 대구)으로 ITS 기반인프라를 확대하고, 중앙부처, 지자체에 분산된 ITS 기반 표준화 및 통합DB 구축
  - 각 부처의 전산센터를 통합한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 추진
- 2만불 달성을 위한 IT839 전략 및 동북아 IT허브 구축 가속화
  - DMB, WiBro 등 8대 서비스 도입·활성화로 민간투자 촉진
    - \* 상반기내 지상파 DMB 및 WiBro(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 추진
    - \* 디지털TV 가시청권(도청소재지→전국)·HD방영시간 확대(주13→20시간)
  - 광대역통합망 등 3대 차세대 인프라 시범사업 본격 추진
  - 해외 R&D센터 유치, IT Complex건설, u-IT클러스터 조성 등 유비쿼터스시대의 글로벌 IT Test-Bed 육성 사업 추진
- IT중소·벤처기업 활성화(IT SMERP)로 경기 양극화 극복
  - 불합리한 구매제도 개선, 협력사 확대, Network Loan 지원 등 통신사업자와 IT중소·벤처기업간 상생적 협력모델 형성
  - 기업의 수요에 부응한 우수인력 배출을 위해 IT전공교육 강화
  - 우수 중소기업 S/W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제도 도입
-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강구
  - 지상파 DMB, WiBro 등 차세대 통신·방송서비스 국제표준화 지원
  - 동남아, 유럽 BRICs 등에 정보통신주재관(현재 미국·중국) 파견

## 보건복지부

### □ 저출산-고령화 추세 대비

-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 제정에 따른 고령사회기본계획 (06~10년) 수립
- 노인요양보험법령 제정 추진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노인일자리 35천개 창출 및 고령친화적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금운용공사를 설치하여 기금의 전문적·안정적 운용기반 확보

### □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및 적극적 탈빈곤 정책 추진

- 최저생계비 실계측 결과를 반영하여 05년도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8.9%)하고, 가구유형별 추가비용이 반영된 합리적 지원방안 검토
- 12세 미만 차상위 계층 아동 및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및 자활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 확대 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장애수당을 기초수급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 보호고용 확대

### □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산업 육성

- 재정건전성 기초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의약분업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적극적 금연정책과 지역암센터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료 확충하고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50대 과제」의 추진 및 과제 발굴 지속



## 환 경 부

### □ 국민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본격 추진,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수립, 악취관리지역 및 시설 집중 관리
-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 정착,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및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 건강한 국토, 쾌적한 생명공동체 구현

-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 등 “전국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06~15년) 수립
- 전략환경평가 시범사업 추진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완료
-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제정 추진

### □ 환경보전기능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 ‘환경보전정책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새집증후군 예방 등 실내공기질 관리, 폐광 등 오염취약지역 관리강화
- ‘화학물질배출량 저감 자발적 협약(30/50 프로그램)’ 추진 및 생활주변유해화학물질 관리기반 마련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역량 강화

- ‘국가환경종합계획(06~15년) 수립 등 국가환경관리 틀 마련
- Eco-STAR(무공해 자동차, 수처리선진화)사업 추진, 친환경상품 구매·판매 지원체계 구축, 중국 및 동남아 환경시장 진출 확대 등 환경기술·산업의 선진화

## 노 동 부

### □ 일자리 만들기와 고용서비스 선진화 적극 추진

-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고용·복지적 정책을 통한 일자리를 적극 창출,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화
- 선진국 수준의 고용안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강화
- 근로생애 단계별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훈련 및 자격의 현장성을 제고

### □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적극 추진

- 3대 근로취약계층(비정규직·여성·외국인)에 대한 적극적·효율적인 근로감독행정 강화로 근로자 권익보호
- 대형재해 고위험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중점관리하는 한편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환에 대한 예방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선진근로복지기반 구축 지속 추진

### □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 중앙·지역·업종·기업단위 노사정 대화체제를 활성화 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갈등 해소를 지원
- 노사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각종 노사협력사업 전개
- 직무성과와 생산성에 기초한 혁신형 임금체계 확산

### □ 근로기준제도 유연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추진

## 여 성 부

### □ 여성인적자원 활용 인프라 구축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등 여성 친화적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운영하여 고학력 여성의 진로 지도 및 경력개발 지원
-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등으로 구성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구성 및 여성취업정보망 구축

### □ 여성 취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직업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의 고학력 여성청년층 취업 지원
- 여성기술인력 및 여성가장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지원체계 구축
- 전업주부 대상으로 자신감회복 및 재취업의지 강화, 구직활동 방법과 요령을 교육하는 직업적응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보급

### □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

- 법정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고 장애아 무상보육지원 대상 확대 및 전담시설 신축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재정지원 관련 제도개선 추진

## 건 설 교 통 부

### □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본격 착수

- 국토종합계획수정(안)을 확정하고,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신수도권 발전방안 추진

### □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 재정 조기집행, SOC 투자 확대, 해외건설 수주증대 등 건설교통분야 종합투자계획을 추진
- 건설산업 선진화 및 R&D 확대를 추진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 □ 서민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

- 주택 52만호, 신도시 건설 등 주택공급을 지속 확충하고, 후분양제 및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 주택공급 개선방안 시행
- 토지구제기본법에 따라 토지구제의 단순·투명·전산화를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시가평가체계 구축

### □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공사를 본격 시행하고, 호남고속철도 보완용역(05.12 완료)을 거쳐 건설기본계획 수립
- 인천공항 2단계 사업 등 동북아 허브공항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철도 등 기간교통망 및 물류시설을 지속 확충

### □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여건 조성

- 도로·철도 교통사고를 연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범노선 선정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
- 2011년까지 하천개수율 100%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년중 760km의 하천을 개수

## 해 양 수 산 부

-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실현 지속 추진
  - 부산 신항·광양항의 지속적인 개발, 중국 상해 신항만 개장(06.1)에 대응한 부산신항 3선석 조기개장 추진
  - 항만자유무역지역 대한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활동의 지속적인 전개
  
- 해운물류산업의 성장기반 확충
  -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제 시행, 국제선박등록법 개정·시행 등으로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 지원
  -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시행 및 선원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각종대책 시행
  
- 항만운영의 고효율화 추진
  - 「부산신항개장준비위원회」 운영, 인천항만공사 설립,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적극 추진
  
- 수산경영 개선을 통한 수산업 내실화 도모
  - 일선 수협외의 구조조정 추진, 농안기금중 수산부분 이관완료 및 「수산발전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05상반기)
  
- 살기좋은 어촌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추진
  - 수산물생산해역 위생관리시스템 도입, 주요수산물 가격안정,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속추진
  -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기 획 예 산 처

- 경제·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
  - 적자재정 편성과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 지속적인 재정운용 시스템 혁신
  - 05~09년 국가재정운용 연동계획을 수립·발표하고(상반기), 06예산 정부안 등을 반영하여 계획 확정후 국회제출(하반기)
  -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부처 자율편성의 내실화 등을 통한 제도 정착
  - 프로그램 예산체제로 전환 추진, 회계제도 정비, BPR/ISP 수립 등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추진기반 마련
    - 새로운 재정운용시스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정 추진
  
- 기금관리제도 개선
  - 기금존치평가를 토대로 기금정비에 관한 정부최종안을 마련하여 법개정 등 후속조치 시행
  - 기금 자산운용체계 개편 및 연기금 투자폴 제도 지속개선
  
-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 재무적투자자의 민자사업 투자 본격 유치, 민자투자의 다변화 및 운영시스템의 내실화
  
-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본격 추진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체계의 조기정착 추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

### □ 시장경쟁의 촉진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

- 경쟁제한적 예규·고시 발굴 및 정비 등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지속 추진(상반기 중 개선검토과제 발굴)
- 카르텔 면책제도 개선, 과징금 한도 상향조정, ‘공공기관 입찰 상황판’ 가동 등 카르텔 방지 장치를 보강(05 상반기)
- 신고포상금제 도입(05 상반기)을 통해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질서를 조기 정착

### □ 개편된 대기업집단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의 구체적 요건을 마련하고 예외 인정을 합리적으로 보완(05.1/4,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사항 구체화 등 공시제도의 차질없는 운영

### □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

- 통합고시제도도입, 광고실증제도강화, 소비자정보제공 지원센터 설립·지정 등 소비자정보제공장치 확대·강화
- 전자상거래분야 결제대금 예치제도 도입으로 거래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소비자불만처리시스템 도입 추진

###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확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관행 개선 등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
- 하도급법 적용분야를 서비스업분야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04.11.25 법개정안 국회제출)

## 금융감독위원회

### □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 및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

-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권역별 조기경보체계를 정비·보완하는 등 효율적 대응체제 구축
- 07년말 적용예정인 新BIS협약 도입 준비, 리스크관리 중심의 금융감독체제 확립 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기능 강화

-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 투자정보가 적기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감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 내부자 거래, 분식회계, 부실감사 등에 대한 조사기능 강화 및 업종 제재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 업무영역 확대, 영업관련 규제완화 등을 통해 증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자금시장의 중개기능 제고

### □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 평가능력 제고를 유도
- 민원·분쟁조정 등을 새로운 감독수요 발굴에 적극 활용하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체계 구축
- 금융정보 공개확대,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 철폐 등을 지속 추진하고 신용관리의 중요성 등 금융관련 교육·홍보 확대